

요약 및 정책건의

1 연구 개요

1.1 연구 배경과 목적

- 시정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회 복지 및 문화, 환경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려면 시민사회 자원과 활력을 적극 활용 필요한 시점임
- 이때, 종교계도 서울시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, 이러한 요청을 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종교계 간 정책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됨
- 다만, 현재 종교계가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는 민간위탁과 민간 지원(보조금지원 등)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, 종교계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정-종교계 간 다차원적 정책협력(중무거버넌스)이 구축되고 활성화할 필요
- 이 연구에서는 시정-종교계 간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, 이에 기초하여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
- 서울시와 종교계 간 이해와 신뢰, 전문성 등에 기초한 쌍방향 중무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종교계가 보유한 인적/물적/재정/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종교계의 자원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사업체계 구축과 제도적 환경의 정비가 필요

1.2 연구 내용과 방법

- 연구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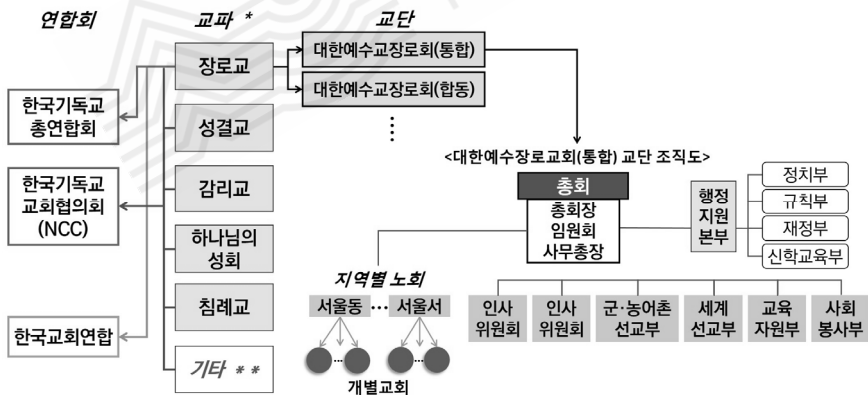
- 4대 주요 종교계로 기독교(개신교), 불교, 천주교, 원불교를 선정하고 이들 종교기관의 기초현황 및 조직구조의 특성을 파악(2장)
- 서울시와 종교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원과 협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사업분야별 참여의향을 조사(3장)
- 위의 내용에 기초하여 서울시-종교계 간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3대 정책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, 구체적인 정책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별 추진전략을 제시(4장)
- 체계적인 연구진행과 실효성 있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 문헌조사, 전문가 면담·자문회의,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함
- 문헌조사: 종교계 관련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문헌조사 실시, 서울시 기 추진 중인 종교계와의 협력사업 정책자료 조사·검토
- 전문가 면담 및 자문회의: 기독교, 불교, 천주교, 원불교 등 주요 4대 종교계 대표·관계자 방문 면담,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실제 여건과 실태를 파악
- 설문조사: 종교시설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협력에 관한 종교계의 인식과 의향을 파악

2 주요 연구결과

2.1 종교계 기초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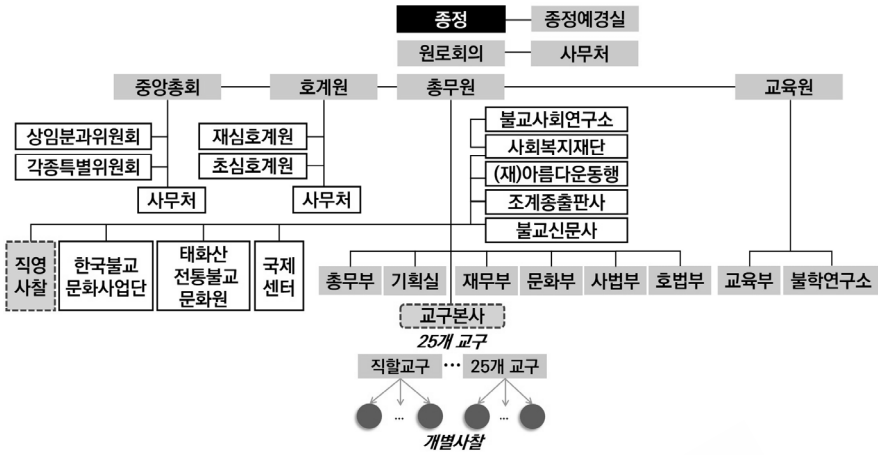
- 2005년 현재, 서울시 종교인구는 약 5,335천 명(전체 인구의 54.6%)
- 기독교 약 2,223천 명, 불교 약 1,643천 명, 천주교 약 1,382천 명, 원불교 약 45천 명으로 추정

- 종교별로 상이한 조직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다수의 법인단체가 존재
- (기독교)개교회 연합체인 84개의 교단과 3개 연합회 외에 212개 법인단체 존재
 - ※연합회: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(진보 성향), 한국교회연합(중도), 한국기독교총연합회(보수)
- (불교)개별 사찰을 총괄하는 29개 종단(조계종, 태고종 등)과 종단협의회, 그리고 91개 법인단체 존재
- (천주교)개별 성당을 포괄하는 서울대교구와 43개의 법인단체 존재
 - ※서울대교구는 한국가톨릭교회 3개 관구 중 서울관구 내 7개 교구의 하나에 해당
- (원불교)개별 교당들을 총괄하는 서울교구와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인단체 존재
 - ※서울교구는 원불교 총부를 중심으로 국내 14개 교구 중 하나로, 서울을 6개 지구로 구분하고 64개 교당이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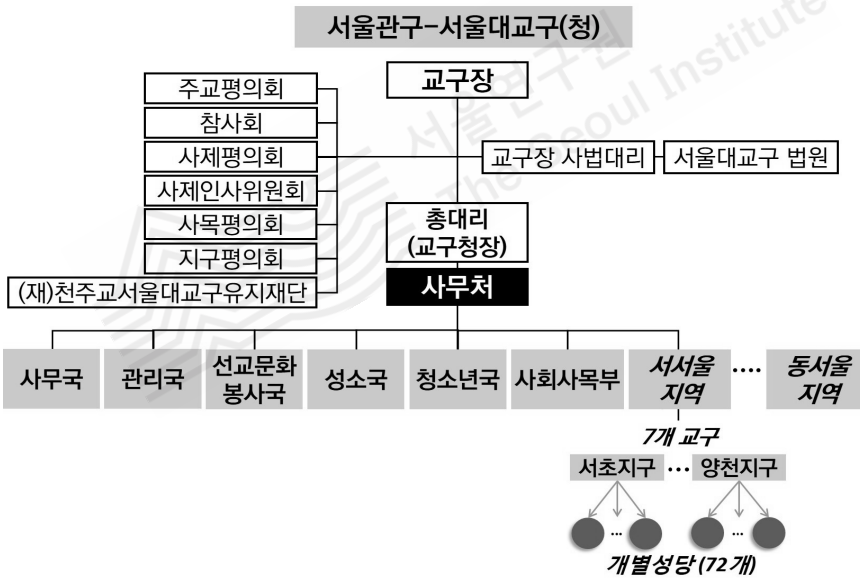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] 기독교 조직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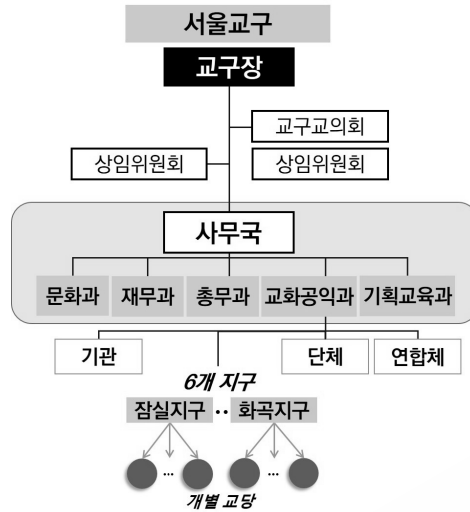
*각 교파, 교단별로 연합회에 자율적으로 가입, **기타에는 구세군대한본영, 정교회, 성공회 등이 있음



[그림 2] 불교 조직구조



[그림 3] 천주교 조직구조



[그림 4] 원불교 조직구조

2.2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여건

- 종교계의 정책사업(민간위탁/민간지원/민관합작/민영화) 참여는 민간위탁과 민간지원(보조금지원 등)을 통한 참여가 중심적
-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 외 보조금지원에 따른 민간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으며, 최근 ‘아름다운 동행’ 사업(이하 동행사업)도 민간지원으로 추진
- 현재 종교계는 343개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 중 68개 사업에 참여
- ※ 기독교는 26개 사업, 불교는 15개 사업, 천주교는 25개 사업, 원불교는 2개 사업에 참여

〈종교인과 서울시의 아름다운 동행사업〉

- 2013년 시정의 주요 사업을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간다는 취지로 시장실 주도 하에 ‘아름다운 동행’사업 추진
- 당초 21개 사업으로 되었으나, 다수 사업은 실효성이 부족해 9개 정도만 실행
-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「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」 등에 근거하여 예산 지원

- 민간위탁은 위탁계약에 근거해 종교계 수탁법인에 운영(시설장 채용 운영)을 위탁하고 있는데, 종교계로부터 몇 가지 불만이 제기됨
 -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사업평가 관련 불합리성, 시설교체 시 시설 종사자(시설장 포함)의 고용불안정 등
 - 일반 수탁자가 지니는 사업적 이해와 구분되는 종교계 수탁자의 공익적/사회적 가치(공공선 실현, 지역사회 공헌) 지향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 등
- 신뢰에 기반을 둔 실질적 협력이 활성화되려면, 민간위탁사업의 합리적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新사업방식(협력사업)으로 전환 등 대안적극 모색 필요
- 한편, 민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(「보조금관리조례」에 의한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)이 마련되어 있음
 - 「지방재정법」에 근거한 「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」 및 동조례·시행규칙에서는 122개 보조사업(그중 4개 사업이 동행사업에 해당)과 사업별 보조율을 규정
 - 이 외 「지방재정법」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근거한 「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」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도 실시
- ‘동행사업’이 이러한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, 동반자 관계 속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음
 - 대상사업 선정과 지원방식은 협의·조정보다는 시 주도로 진행
 - 시가 공동의 사업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절차 없이 사후 관리·감독에만 의존

2.3 협력에 필요한 종교계 가용자원 및 주체(조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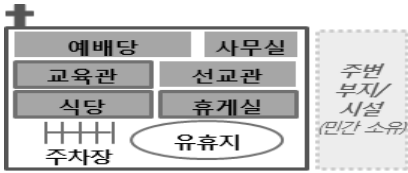
- (종교계별 가용자원)종교계 대상 가용자원 조사 결과, 4가지 유형의

가용자원 식별(세부 내용은 중간보고자료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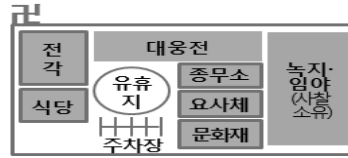
- 4가지 자원 유형은 무형자원/조직·인적 자원/물적 자원/재정자원 등
- 도출된 세부 자원들은 일차적으로 협력사업 발굴에 활용되었으며, 실제 협력사업 추진 시 투입자원으로 활용 가능
- 다양한 자원 중 [그림 5]와 같은 물적 자원(종교시설)과 조직·인적 자원의 활용가능성이 높고, 이 외 문화분야에서 무형자원 활용성도 고려 필요

[표 1] 협력사업에 활용가능한 종교계별 가용자원

| 구분 | 기독교 | 불교 | 천주교 | 원불교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무형자원 | -문화재/사적(정동교회 등) -순교성지(양화진 등) -절기문화행사(상탄절 등) | -문화재/사적(전통사찰) -의례/의식(연등회 등) -민속관습(발우공양 등) -템플스테이 | -문화재/사적(영동성당 등) -순교성지/성인 -성지순례길 -절기문화행사(상탄절 등) | -가정의례(천도제 등) |
| 조직·인적자원 | -평신도자치회(구역회) -교단/노회조직 -선교단체 -교단별 연합회조직 -재단 조직 -한국대학생선교회 -기독교방송 | -사찰 신도회 -총무원 부서 -재단 조직 -대학생불교연합회 -자원봉사센터 -불교방송 | -본당 소공동체 -교구조직 -사무국 부서 -재단 조직 -가톨릭대학생연합회 -자원봉사센터 -평화방송 | -교화단 -사무국 부서 -청년회 -봉공회 -원음방송 |
| 물적자원 | -교육관/선교관 -쉼터/카페 -주차장 -복지시설 -신학대학/ 미션스쿨 -수양원 | -선방 -조계종박물관 -주차장, 유희부지 -복지시설 -불교대학/ 중립학교 -산림/공원 | -교육관 -회합실/강당 -소성당 -주차장 -복지시설 -가톨릭대/ 미션스쿨 | -선방/생활관 -훈련원, 문화원 -주차장 -복지시설 -원불교교구물(하이원빌리지) -요양원 |
| 재정자원 | -교회(헌금, 임대료) -교단/연합회(회비, 임대료, 사업수익) | -사찰(사주/불사, 임대료) -총무원(사찰분담금, 사업수익, 임대료) | -본당(헌금) -교구(본당분담금, 사업수익, 임대료) | -교당(헌공금, 임대료) -총부 및 교구(회비, 사업수익, 임대료) |



*교육관: 영유아실, 주일학교실 등 다양하게 활용
*휴게실: 신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
[기독교] 교회



*전각: 예불, 교육 등의 장소, *중무소: 사무실
*요사채: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
[불교] 사찰



*회합실: 자유롭게 그룹모임이 가능한 공간
*사제관, 수녀원: 신부와 수녀들이 거주하는 공간
*교육관: 영유아실, 주일학교실 등 다양하게 활용
[천주교] 성당
※□: 서울시와 협력시 활용될 수 있는 종교기관 시설



*교육관: 영유아실, 주일학교실 등 다양하게 활용
*생활관: 다양한 용도로 활용
[원불교] 교당

[그림 5] 종교별 활용가능한 물적 자원(종교시설)

- (사업참여주체)협력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사업을 둘러싼 의사결정, 협의·조정 등 종교계의 조직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긴요
- 의사결정구조 및 조직자율성/독립성 측면에서 종교계별로 상이한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
 - 기독교는 개교회(당회)-노회-교단-연합회로 구성되는 조직위계는 있으나 교단(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등) 중심의 분권적 의사결정구조
 - 반면, 불교와 천주교, 원불교는 모두 하향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짐
 - 불교는 하위 단위조직들의 자율성/독립성이 미미한 반면, 천주교와 원불교는 제한적이거나 자율성/독립성 존재
 - (시사점)종교계별 조직특성을 고려해,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협약을 체결하고, 공식적·비공식적 협의채널을 마련
 - ※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닌 불교, 천주교와 달리, 하위단위(개별교회)의 독립성·자율성이 강한 기독교는 별도 협의·조정 채널 마련 필요

2 4 협력사업 정책수요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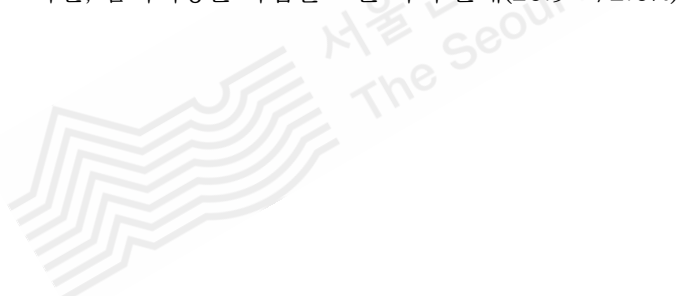
- 조사대상자(182개)의 30.8%는 시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였고, 80.2%는 자체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했는데, 양자 간 사업내용은 유사
 - 市 정책사업 참여: 보육(12.6%) > 노인복지(12.1%) > 기부·자원봉사(11.0%) > 소외계층 지원(10.4%) 등이 주를 이루고,
 - 공익목적의 자체사업: 기부 및 자원봉사(48.9%) > 소외계층지원(43.4%) > 노인복지(39.6%) > 보육(29.1%) > 청소년 보호(21.4%) 등(*복수응답)
- 이러한 유사성은 사업동기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, 주로 이웃 사랑과 자비의 실천, 지역사회 봉사가 주된 동기로 작용
 - 市 정책사업 참여 동기: 이웃에 대한 사랑·자비의 실천(73.2%), 지역사회에의 봉사(71.4%), 선교 및 포교활동의 일환(33.9%) 등
 - 자체 공익사업 추진 동기: 이웃 사랑·자비의 실천(84.2%), 지역사회 봉사(65.8%), 선교·포교활동의 일환(32.2%) 등(*복수응답)
- 협력사업에 활용가능한 자원은 종교시설 일부 활용(40.1%)과 종교내 문화·교육 프로그램(31.9%) 등을, 사업참여 시 고충사항은 사업정보 부족(44.0%), 활용 공간·시설 부족(43.4%) 등을 응답
 - 활용가능한 자원: 종교시설 일부 활용(40.1%) > 훈련프로그램 활용(31.9%) > 자원봉사자(30.2%) > 종교단체 조직(21.4%) > 외부 주창장, 공터 활용(14.8%)
 - 사업참여 시 애로사항: 사업에 대한 정보부족(44.0%) > 활용 공간 및 시설부족(43.4%) > 재정 부족(41.2%) > 참여인력 부족(32.4%) > 까다로운 행정절차(17.6%)
 - 협력사업 활성화 필요 요소는 협력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(41.2%), 시의 상시적 재정지원(36.3%), 일선 종교기관의 자율성 부여(22.5%) 등을 주로 응답

[표 2]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

(단위 : %)

| 구분 | 사업정보 제공 및 홍보 | 시의 상시 재정지원 | 일선기관의 자율성 부여 | 행정절차 간소화 | 시-종교간공식협약 체결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비중(%) | 41.2 | 36.3 | 22.5 | 18.1 | 17.0 | |
| 구분 | 명확한 역할분담 | 사업협의 조정·채널 | 공무원의협력 사업인식개선 | 투명성강화 제도 개선 | 민간위탁사업 제도 개선 | 협력을 위한 법·제도 정비 |
| 비중(%) | 16.5 | 11.5 | 9.9 | 8.8 | 5.5 | 4.4 |

- 이 연구에서 도출한 23개의 협력사업의 추진주체 인식과 참여의향은 다양한 응답을 나타냄
- 도출된 협력사업 각각에 대해 협력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, 사업추진 시 참여의향에 대해 사업별로 조사(아래 표 참조)
- 모든 사업에서 응답자의 50% 이상이 협력방식이 더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였고, 이 중 5개 사업은 70% 이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
- 다만, 참여의향은 사업별로 큰 차이 존재(20.9~72.0%)



[표 3] 협력사업 정책수요 설문조사 결과

(단위 : %)

| 사업 구분 | 사업의 추진주체 | | | 참여 의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| 종교계중심 | 협력 | 서울시중심 | |
| ① 「온라인시니어인재은행」등록 및 관련 정보 홍보 | 11.0 | 65.9 | 23.1 | 46.7 |
| ② '데이케어센터'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| 7.1 | 64.8 | 28.0 | 34.6 |
| ③ 저소득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| 7.7 | 73.1 | 19.2 | 52.2 |
| ④ 종교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| 17.6 | 68.7 | 13.7 | 41.2 |
| ⑤ 신자들 상호간 자원봉사형태의 공동육아서비스 제공 | 24.2 | 64.3 | 11.5 | 46.2 |
| ⑥ 한부모가족 자립화지원을 위한 임시주거공간 지원 | 3.8 | 54.4 | 41.8 | 24.7 |
| ⑦ 재난(폭염,한파 등) 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쉼터 제공 | 3.3 | 58.2 | 38.5 | 27.5 |
| ⑧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| 8.8 | 70.9 | 20.3 | 52.7 |
| ⑨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지원(상담, 문화교육 등) | 6.6 | 68.7 | 24.7 | 50.0 |
| ⑩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(주거 및 정서지원) | 2.7 | 56.6 | 40.7 | 26.4 |
| ⑪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주거 지원 | 1.6 | 54.4 | 44.0 | 20.9 |
| ⑫ 자원봉사 인력풀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성화 | 12.1 | 73.1 | 14.8 | 67.0 |
| ⑬ '에코마일리지' 사업에 회원으로 참여 | 4.9 | 68.7 | 26.4 | 67.6 |
| ⑭ 지역사회를 위한 '녹색문화조성' 사업 참여 | 7.1 | 69.2 | 23.6 | 72.0 |
| ⑮ 저소득층에게 생필품지원하는 '서울디딤돌' 사업참여 | 8.8 | 73.6 | 17.6 | 62.6 |
| ⑯ 종교계의 (잠재적)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 | 33.5 | 59.9 | 6.6 | 44.0 |
| ⑰ 종교계 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·운영 | 24.7 | 64.8 | 10.4 | 40.7 |
| ⑱ 종교시설을 이용한 숙박형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| 32.4 | 61.5 | 6.0 | 34.1 |
| ⑲ 종교시설 일부를 활용한 '작은도서관' 활성화 사업 | 26.9 | 63.7 | 9.3 | 46.7 |
| ⑳ 사회적배려기업, 영세사업자 대상의 유통판매 공간 지원 | 8.2 | 53.8 | 37.9 | 31.9 |
| ㉑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·캠페인 운영 | 9.9 | 76.4 | 13.7 | 72.0 |
| ㉒ 유희시간대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화 | 11.0 | 67.0 | 22.0 | 39.0 |
| ㉓ 시민친화형 장묘문화조성을 위한 장묘시설 확충 사업 | 16.5 | 53.8 | 29.7 | 25.8 |

※서울시 중심 : 서울시 단독+서울시주도, 종교계 중심: 종교계 단독+종교계 주도

3 정책건의

3.1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

- 1) 서울시-종교계 간 정책협력에 관한 제도적 기반 확립
 - (현안)동행사업이 「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」에 근거하고 있으나, 종교계와 실질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모델이 미비
 - 기존 「보조금관리조례」 보조사업 방식은 대상사업 선정과 지원내역 등이 협의·조정보다는 시 주도로 정해지고, 사업추진도 사후 관리·감독에만 의존
 - (추진전략)상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, 우선 실질적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사업(협력사업)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모델을 제도화
 - 협력사업 모델은 목표, 시설소유권, 사업추진체계, 거버넌스 등에서 기존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과 차별화 모색 필요

[표 4] 민간위탁사업·보조사업·협력사업 특성 비교

| 구분 | 민간위탁사업 | 민간지원사업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| 보조사업 | 협력사업(동행사업) |
| 목표 | 시정사업의 위탁·위임 | 민간제안사업 지원 | 시정사업 협력추진 |
| 시설소유권 | 공공(시) | 민간(종교계) | 민간(종교계)/공공(시) |
| 사업추진체계 | 절차 | 하향식(공개경쟁입찰) | 수평식(상호 협의) |
| | 방식 | 계약(contract) | 협정(compact) |
| | 지원범위 | 과업지시서상 규정 | 보조율에 의한 결정 |
| 거버넌스 | 관리감독 | 사업(경영)평가 및 재계약심사 | 자율관리, 외부감사(분야별 협의체) |
| | 운영체계 | 사업별 운영위원회(시 주도) | 사업자 자체운영 |
| 법적 근거 |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| 보조금 관리조례 | - |
| 재원 | 부서 예산 | 부서 예산 | 별도 기금 |

- 협력사업 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별도의 「서울특별시와 종교계 간 정책협력에 관한 조례」(가칭)를 제정
 - 동 조례는 정책협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수용하고 협력사업의 방식을 구체화하여 종교계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
 - 동 조례 제1조에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협력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정한다」고 명문화
 - 또한 동 조례에는 보조사업과는 별개로 종교계와의 협력사업 범위와 주체 간 역할분담, 협력사업 방식, 즉 추진절차와 관리·운영체계 등의 내용을 규정
 -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‘공동위원회’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, ‘정책협력기금’ 설치에 관한 사항 등도 명시
- 협력사업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는 ‘敎市정책협력기금’ 설치(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)
 - 지원대상이나 규모 등이 사전에 결정되는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협력사업은 협의·조정에 의해 결정되므로, 재원의 탄력적 편성·운영 시스템 필요
 - 기금을 설치해 예산편성과정이나 심의단계에서 대폭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운용의 안정성 확보 필요
 - ※ 예산 500억 원(2013년 기준)이 사전에 책정된 주민참여예산은, 사업선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(안)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 또는 일부 사업 폐지

2) 협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 해결

- (현안)종교계와의 실질적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등 기

존 사업을 둘러싼 현안문제 해결과 신뢰 구축 등이 선결요건임

- (선결조건 1)민간위탁 절차·운영방식에서 종교계 특수성 고려 필요
- 종교계가 참여하는 민간위탁사업에서 몇 가지 불합리성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

〈민간위탁에 대한 종교계의 불만사항〉

- ① 이사회 구조상 자부담계획(재단전입금 등) 및 연도별 집행계획의 사전 확정 곤란
- ② 수탁자(대주교, 총무원장 등)의 위상과 관련하여 협의 및 보고주체의 적정성 문제
- ③ 선정평가 시 비계량화된 자원(자원봉사자, 후원물품 등)에 대한 평가항목 부재
- ④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분리로 인한 권한과 책임 간 불일치 존재
- ⑤ 수탁법인 교체 시, 시설종사자 중 일부(계약직)의 고용상 불안정성 존재
- ※ 종교계 참여의 민간위탁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간담회 추진 지시(2013.11.18)

- (선결조건 2)민간위탁 수행 시, 일반 수탁자와 구분하여 종교계 수탁자가 가지는 사업의 목적 가치와 윤리적 양식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
- 사회적 가치(사랑·자비 실천, 지역사회공헌 등)와 선교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나, 공공은 영리적 사업자로 인식하거나 선교활동만을 지향하는 단체로 간주
- (추진전략1-1)선결조건 1과 관련해, 사업자 선정평가에 관한 ①, ②, ③의 문제는 종교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침 등으로 개정 대응 필요
- ① 자부담계획 및 연간운영 계획 관련:
 - 〈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〉에서 당해연도 ‘연도별 재정투자계획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년도 투자내역으로도 기재 가능하도록 개정
 - 아울러, 평가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
- ② 협의 및 보고주체의 위상:
 -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수탁자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대신 협의·보고할 수 있도록 함
- ③ 비계량화된 자원의 미반영:
 - 위탁심사 시 법인이 동원한 후원자, 자원봉사, 후원금품 등의 항목이 일관되게 심사·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

- (추진전략1-2)종교계의 특수성을 수용하고, 위탁사업에 내재된 ④, ⑤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‘협력사업’으로의 전환 모색
 - 현재 종교계가 참여하고 있는 위탁사업 중 예산지원형 사업으로서 동행사업과 유사한 목적 및 참여동기를 가진 사업은 협력사업으로 전환 모색
 - 68개 위탁사업 중 노숙인보호시설(영등포보현의집 등), 위기다문화 가정지원(폭력피해이주여성공동생활가정 등), 노인보호시설(강동 노인종합복지관데이케어센터 등) 등 29개 사업은 종교계 동의를 거쳐 협력사업으로 전환 검토
 - ※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본보고서 참조
 - 민간위탁사업 대신 협력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적극적 동기를 유발하고,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신뢰의 기반 마련
- (추진전략2)협력사업 관련 인식 전환·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실시
 - 민간위탁사업 주체인 종교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공무원 교육·홍보, 종교계와 市의 주기적 교류의 장 등 마련
 - (교육)市 주도로 종교계 협력사업 참여사례 강연 등을 기획·진행하는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추진(※종교계 저명인사 초청 교육도 병행)
 - (홍보)종교계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홍보 동영상 제작 및 정책백서 발간
 - (교류)종교계별로 기존의 ‘서울시 교회와 시청협의회(교시협의회)’모임을 확대
 - ※ 교시협의회(1990년 창립)는 서울지역 교회와 서울시청(교인)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, 매년 조찬기도회(교사회 집행부, 市공무원)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

- 3)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무거버넌스 구축
- (현안)상이한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여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
 - 종교계 내부 합의에 기반을 둔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, 다양한 협력사업 분야에서 개별 사업주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층위의 협약체결 필요
 -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업추진과정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협력채널 마련
 - (추진전략 1)종교계의 합의에 기초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 개별 사업협약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업무협약(MOU), 나아가 대협약 체결
 - (분야별 업무협약)현재의 <복지발전 상호협약>과 마찬가지로, 문화,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와 범종교협의체(분야별) 간 업무협약을 체결
 - ※ 서울시-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(이하 한종사협) 간 <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>에서는 희망온돌사업과 종교계 나눔 및 홍보 사업 외에 8개 사업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
 - 분야별 업무협약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개별 사업들의 범위 및 운영체계, 서울시와 종교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지원 내용들을 규정
 - 협력관계를 더 큰 틀에서 협의·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시 주요 종교지도자들과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[대협약]을 체결
 - 대협약은 서울시와 종교계 간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일반 시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추진
 - ※ '정부-대학-고교 공교육 살리기 대협약',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 간 '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(협약)' 등의 사례 참조

- (추진전략 2)협력사업 추진과정을 협의·조정할 수 있는 서울시와 종교계 간 협의채널 마련
- (사업별 협의채널)사업별로 추진과정 전반을 협의, 관리할 수 있는 채널로서 '○○협력사업 운영위원회'를 구성·운영(사업참여주체 + 시(구) 주관부서)
- (분야별 협의채널)분야별 조직여건을 고려해 복지 분야의 한중사협 같은 협의창구를 문화, 환경 등 여타 사업분야로 확대·유도함
- ※ 구세군대한본영 사회복지부,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,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, 대한성공회 사회선교부 등 11개의 종(교)단으로 구성된 <한중사협> 사례 참조
- 이를 통해 시와 해당 분야별 종교협의체 간 협력사업 발굴, 주체 간 역할분담, 운영방식, 자원배분 등을 협의
- (공동위원회 구성)상호 합의를 상징하고 종교계의 협력을 지속 견인하기 위해 '사회발전을 위한 서울시-종교계 간 정책협력위원회'(가칭)를 구성·운영
- ※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관련 산업·경제·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<서울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> 사례 참조
- 동 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주요 종교지도자가 참여하며, 연2회 회의 개최
- (시 담당조직)현재의 종무팀 조직을 기획팀과 사업팀으로 이원 확대 개편

3 2 협력사업 추진방안

- 몇 단계의 사업 발굴 절차를 거쳐 총 23개 협력사업 도출
- 기존의 동행사업 외에 시정운영계획, 업무계획을 통해 가용자원의 활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67개 협력사업을 일차로 도출하고,
- 협력사업의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고, 사업별 협력사업

의 필요성 및 참여의지 조사를 거쳐 최종 협력사업 23개를 발굴

[표 5] 서울시-종교계 협력사업

| 유형 | 사업명 | 분야 | 담당부서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시설 자원 활용 형 | ① 종교시설을 활용한 '서울형 데이케어센터' 확충 사업 | 사회복지 | 어르신복지과 | 동행 |
| | ② 종교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| 사회복지 | 출산육아담당관 | 동행 |
| | ③ 재난취약계층(독거어르신 등)을 위한 마을쉼터 제공 | 사회복지 | 도시안전과 | |
| | ④ 노숙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 | 사회복지 | 자활지원과 | |
| | ⑤ 한부모가족 자립화를 위한 주거공간 지원 | 여성가족 | 여성가족정책담당관 | 동행 |
| | ⑥ 사회적배려기업의 유통마케팅 채널 다각화 | 공유경제 | 경제정책과 | |
| | ⑦ 유희시간 대 종교시설 내 주차장 개방화 | 공유경제 | 사회혁신담당관 | |
| | ⑧ 시민친화형 장묘문화 조성을 위한 추모시설 확충 | 문화관광 | 어르신복지과 | |
| | ⑨ 종교시설 내 숙박형체험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| 문화관광 | 관광정책과 | |
| | ⑩ 종교시설을 활용한 '작은도서관' 운영 활성화 | 문화관광 | 문화예술과 | 동행 |
| | ⑪ 종교계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 | 여성가족 | 외국인문화담당관 | |
| 인적 자원 활용 형 | ⑫ 종교계와 협력하는 전주기적 자살예방체계 구축 | 사회복지 | 보건의료정책과 | 동행 |
| | ⑬ 종교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육아사업 활성화 | 사회복지 | 출산육아담당관 | |
| | ⑭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자원봉사자 확대 | 사회복지 | 어르신복지과 | 동행 |
| | ⑮ 베이비부머 전문가 인재풀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| 자원봉사 | 어르신복지과 | 동행 |
| | ⑯ 재능있는 대학생 신자를 활용한 재능나눔 활성화 | 자원봉사 | 행정과 | 동행 |
| | ⑰ 종교계가 함께하는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활성화 | 환경에너지 | 녹색에너지과 | 동행 |
| | ⑱ 종교계 참여를 통한 푸른 지역사회 만들기 | 환경에너지 | 공원녹지정책과/ 조경과 | 동행 |
| 무형 자원 활용 형 | ⑲ 종교계의 잠재적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 | 문화관광 | 문화정책과 | |
| | ⑳ 종교시설 및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·운영 | 문화관광 | 관광정책과 | |
| | ㉑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 대상 문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 | 사회복지 | 문화예술과 | |
| | ㉒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 | 기타 | 행정과 | |
| 재정 | ㉓ 지역사회 저소득층 대상 '서울디딤돌'사업 활성화 | 사회복지 | 희망복지지원과 | |

*동행: 아름다운동행 사업으로 기 추진되던 사업

- 협력사업은 사업유형별로 볼 때, 시설활용형 11개, 인적·조직 활용형 7개, 무형자원·프로그램 활용형 4개, 재정활용형 1개 등임

- 분야별로는 사회복지(9개)가 다수이고, 문화관광 5개, 환경에너지 2개, 공유·경제 2개, 자원봉사 2개, 여성가족 2개, 기타(북한이탈주민) 1개 등임
- 이 중 동행사업은 데이케어센터,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10개 사업이 해당
- 협력사업의 추진체계는 기획·준비단계-협의결정단계-사업수행단계-사업평가단계 등 네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
 - (기획·준비단계)주관부서는 분야별로 구성된 종교협의체를 참여시켜 협력대상사업과 추진방식, 재원 등을 사전 논의하고, 이를 토대로 '협력사업추진계획' 수립
 - (협의결정단계)분야별 종교협의체는 개별 주체의 사업의향서를 취합, '사업별 추진계획서'를 작성·제출하며, 분야별 위원회는 그 계획서를 최종 심의·결정
 - ※ 분야별 위원회는 서울시(주관부서, 종무팀)와 분야별 종교협의회,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기구로서, 협력사업 사전적 논의, 사업 참여주체 결정, 사업평가 등을 수행
 - 담당부서와 사업 참여주체는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, 활용자원 확인, 운영위원회 구성 등 '운영계획'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협약 체결
 - (사업수행단계)사업 참여주체는 협력사업을 운영계획에 의거해 집행하고, 사업별로 구성된 '○○협력사업 운영위원회'가 자율적으로 관리·감독
 - (사업평가단계)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, 사업참여주체는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함

| 단계 | 내용 | 주체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서울시 | 종교계 |
| 기획·준비단계 | 협력대상사업, 추진방식 사전 논의(협의) | 서울시 + 분야별 종교협의체 | |
| | 협력사업추진계획 수립 | 주무부서(종무팀) 및 담당부서 | - |
| 협의결정단계 | 개별 주체의 사업의향서를 취합하여 사업별 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 | - | 분야별 종교협의체 |
| | 심의 및 최종 사업추진 결정 | 분야별 위원회 | |
| 사업수행단계 | 사업참여주체별 운영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| 담당부서 | 사업참여주체 |
| | 사업집행 | - | 사업참여주체 |
| 사업평가단계 | 사업관리·감독(자율적) | '○○협력사업운영위원회' | |
| | 사업평가 | 분야별 위원회 | |
| | 정산보고 | - | 사업참여주체 |

[그림 6] 협력사업의 추진체계